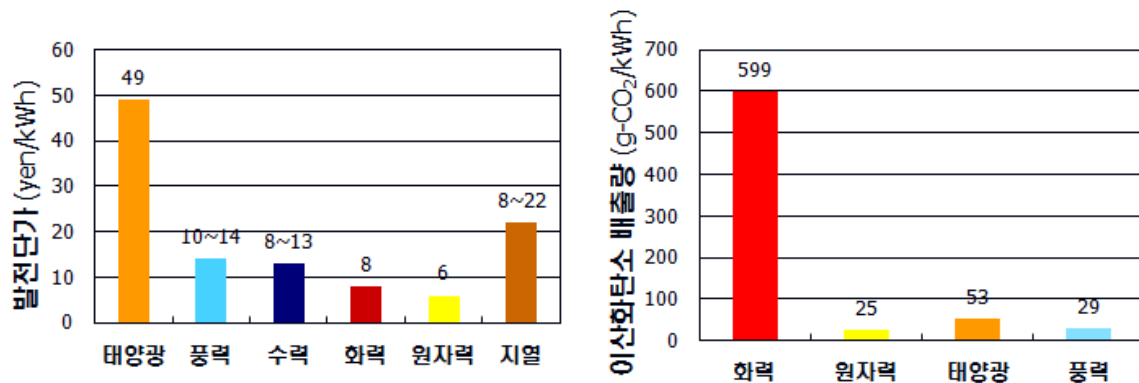


経団連, 에너지정책에 관한 제언 발표

経団連은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전력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고의 조기 수습 및 전력수급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제언을 발표함

- 기업이 향후 국내에서 생산, 설비투자를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 에너지가 경제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중요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안정공급(Energy security), 경제성(Economy), 친환경(Environment)의 우선 순위를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상황을 근거로 검토하여 새로운 에너지 믹스 구축 필요
 - 에너지공급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지 않으면 기업의 제조거점 등의 해외이전, 국내의 신규 설비투자의 억제 등 일본 경제의 공동화는 피할 수 없음
 - ※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석탄화력발전, LNG화력발전, 수력발전이 상대적으로 낮고, 석유화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이 높음 (에너지백서 2008)
 -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우선과제로는 향후 5년 동안 전력 안정공급 대책을 제시하되,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대책은 자제
 -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정책을 검토하고 대책을 결정할 때 비용효과를 포함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공개 및 대국민 토론의 장 마련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 에너지백서 2010을 토대로 그림 작성

□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전력공급 확보에 대한 긴급현안으로 6가지 대책 제시

- ①전력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한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전력수급대책, ②정기안전점검 종료후 정지상태에 있는 원전의 조기가동, ③민관 협력에 의한 화석연료의 원활한 조달 확보, ④가정용 발전설비 및 축전지 도입에 정책적 지원, ⑤에너지절약 기기 등의 도입 및 BEMS, HEMS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화 지원, ⑥올 여름의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의 개선이 확실히 가시화될 때까지 규제완화의 지속

□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중장기적인 시야에 입각한 에너지정책의 재검토 대책 제시

- (새로운 에너지 믹스) 에너지 믹스를 검토할 때 각 에너지의 장·단점, 기술동향을 현실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정공급과 경제성 등 국내에서 먼저 실현해야 할 목표를 근거로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 형성

- (원자력) 순수 국산에너지인 원자력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안전성 확보를 대전제로,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기준의 발본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얻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
- (화석연료) 화석연료의 안정 조달·공급을 위한 연료원의 다양화, 고효율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CCS의 실용화 등의 연구개발 강화
 -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탄소회수·저장기술) :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 지중 등으로 저장하는 기술. 경제산업성은 CCS의 대규모 실증사업시의 안전면·환경면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 CCS연구회를 통해 검토해 오고 있음. 한편, CCS 분리·회수 비용을 2015년경에 톤당 2000엔, 2020년경에는 1000엔으로 저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2009년도 이후 빠른 시일안에 대규모 실증사업에 착수하여, 2020년까지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재생가능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는 에너지자급률 향상과 지구온난화 대책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나, 비용효과와 물리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도입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일본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현실적인 도입계획 수립 필요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기기의 도입, 설비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의 중점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에너지절약형 라이프스타일 및 워킹스타일의 재검토
 - ※ 에너지절약은 제5의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만으로도 약 1/3의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며, 「2009 세계에너지전망(IEA)」에서는 2030년까지의 세계 온실가스 감축 투자의 60%가 효율 향상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이번 동일본대지진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에너지기술을 구사하여 재해에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공급 시스템 구축

- (집중형전원과 분산형전원의 연대강화) 두 전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상호 보완관계를 높여 전원의 안정공급, 고효율 및 높은 위기 대응능력을 갖춘 베스트 믹스 구축
 - (재해에 강한 인프라정비) 전력부문은 주파수 변환소(FC)의 증강 및 지역간 연계선의 정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 석유부문은 국가 비축유의 활용을 포함한 공급망의 유지·강화 도모, 가스파이프라인의 정비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과의 검토
 - (스마트그리드 구축) 일본의 선진기술을 활용하여 모델 도시의 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포함한 여러 과제를 도출하여 실용화 추진
 - (지구온난화정책) 산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 효율의 유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부는 양국간 오프셋·메커니즘의 구체화를 가속화하여 일본의 온난화대책의 근간으로 추진
- ※ 탄소시장 규모 : 640억 달러('07) → 1,500억 달러('10) (The World Bank, 2008)

□ 시사점

- 정기점검을 마친 원전의 조속한 재가동 등,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의 에너지 공급 및 전력수급에 관한 제약에서 조기에 벗어나 지진으로부터의 부흥과 일본경제의 재출발에 도움이 되도록 전력수급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향후 전력수급 대책은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은 원전의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여름 이후의 전력수급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자료 : (社)日本經濟團體聯合會(2011. 7.14)